

News

신한은행도 전세대출 금리 인상...가산금리 0.2%p 높여

조선비즈

신한은행,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 산정에 쓰이는 가산금리를 0.2%p 높이기로... 연 2.97~4.07% 로 인상
풍선효과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절반이 실수요 '전세대출'

동아닷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98조 8,149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4.28%(28조 6,610억 원) 증가... 금융당국 제시한 관리 목표치 연 5~6%에 가까워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19조 6,299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5% 차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이 14조 7,543억 원(14.02%) 급증

한숨 돌린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듯

동아일보

NH농협은행, 빚썸과 코인원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연장 여부 결정할 예정... 신한은행은 이번 주내로 코빗과 재계약 여부 결정 계획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가능... 실명 계좌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는 줄폐업할 것으로 전망... ISMS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곳 24곳

핀테크에 밀릴 수 없다...은행권, 사설인증서 확보 총력

전자신문

5대 은행, 하반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받기 위한 절차 돌입... 빅테크와 금융권 간 사설 인증서 경쟁 치열해질 것...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맞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 획득 필수라고 판단... 충성 고객 확보 뿐만 아니라 빅테크에 밀리면 안된다는 경쟁의식도 존재

'코로나 4차 유행'에도 고속도로 '짝짝'...보험사 속은 타들어간다

이코노미스트

생명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고령 금융소비자도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완화... 고령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가입 선택권 줘야 한다는 취지
고령금융소비자가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상품 가입 시 청약철회기간 최대 45일로 확대... 80세 이상 소비자 변액보험 가입 권유 내용도 삭제

코로나19로 종신보험도 비대면 가입 늘어

파이낸셜뉴스

그간 종신보험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워 대면영업을 중심으로 진행
KB생보 설문조사 결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종신보험 가입 경로 선호율은 약 41.2%에 달해...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화되어 종신보험도 온라인 가입 증가 중

'과징금 폭탄' 증권사... "시장조성자 반납"

매일경제

금감원, 국내외 9개 증권사에 시장조성 행위 중 일부에서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4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사전 통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 아닌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 이례적인 법 적용이라 최종 제재 확정까지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서학개미 열풍...혜택 강화 나서는 증권사

데일리안

국내증시에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며 해외 투자가 증가... 올해 미국 주식 결제금액 8월 말 기준 24조 3,70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6.79% 증가
증권사들의 외화증권 수탁수수료 수익도 증가 중... 삼성증권 상반기 891억원, 키움증권 878억원, 미래에셋 825억원 수익... 지속적으로 해외투자자 유치 노력할 것으로 전망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